‘짝퉁 낙지’ 적발 업소들 버젓이 문열고 영업

중국산 낙지 국산 둔갑 판매 수협 광주공판장 가 보니

■판매장 현황은
수협 소속 중도매인 31명
수산물판매장 42개 운영
13명이 ‘가짜’ 팔다 적발

■왜 낙지였나
물량 적고 구분 쉽지않아
국산 8천원·中産 5천원
이윤도 많이 남아

■수협 대응은
원산지 위반 적발해도
영업정지·퇴출 권한없어
규정 손질 재발방지 시급

■시민 반응은 혈세로 지은 곳에서 먹을거리 장난이라니… 자격박탈 등 엄단하라

2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잔품처리장(판매장). ‘수산물 팔 때나 살 때나 원산지를 확인합시다’라는 가로 5m·세로 60㎝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임을 강조한 것임에도, 검찰이 전날 이 곳에서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 또는 무안산 뻘낙지로 속여 판매한 중매인 13명을 적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 했다. 전날 알려진 검찰의 ‘짝퉁’ 산낙지 판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현수막을 보고 “사과 현수막을 거는 게 먼저 아니냐”고 비아냥댔다.

이날 중도매인들은 광주지검이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 또는 무안산 뻘낙지로 속여 판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중도매인을 적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소비자들의 발길이 부쩍 줄었다고 했다.

또 넓은 판매장에 들어서니 42개 점포마다 마련된 수족관, 고무 대야 등에는 국내산(파란색), 수입산(노란색), 원양산(흰색) 등 색깔별로 구분한 원산지 표시 카드가 붙어있었다. 판매장을 찾은 상당수 소비자들의 눈길도 파란색 카드가 붙어있는 상자에 담긴 수산물에 집중됐다.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수협중앙회가 검찰 단속 뒤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선뜻 지갑을 여는 소비자는 많지 않았다. 국내산·중국산 등 쉽게 구별할 수 없는 탓에 소비자들은 “진짜 국내산 맞아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등 모든 수산물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수협을 믿고 찾아왔던 상당수 소비자들은 지난 3년간 수협 소속 중도매인 36명 중 13명의 중매인이 ‘국내산’이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중국산 낙지를 비싼 값에 팔아왔다는 행태에 비난을 쏟아냈다.

국내산 낙지 한 마리당 시중가격은 8000원(상품 기준)으로 중국산 5000원에 비해 30%이상 비싸다.

수협은 사과 플래카드를 걸기는 커녕,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들이 버젓이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 판매장 관리를 하고 있을 뿐 판매장 재배정 이외 영업정지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온라인 등에는 원산지를 속인 ‘짝퉁’ 중국산 산낙지를 팔다가 적발됐음에도, 아무 거리낌없이 영업 행위를 하는 데 따른 불만도 터져나왔다.

시민 정모(37·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시민 혈세로 지은 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소비자를 속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영구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줄면서 어민 피해가 큰 상황에서 어민들을 보호해야할 수협이 허술한 관리로 어민들을 두 번 울렸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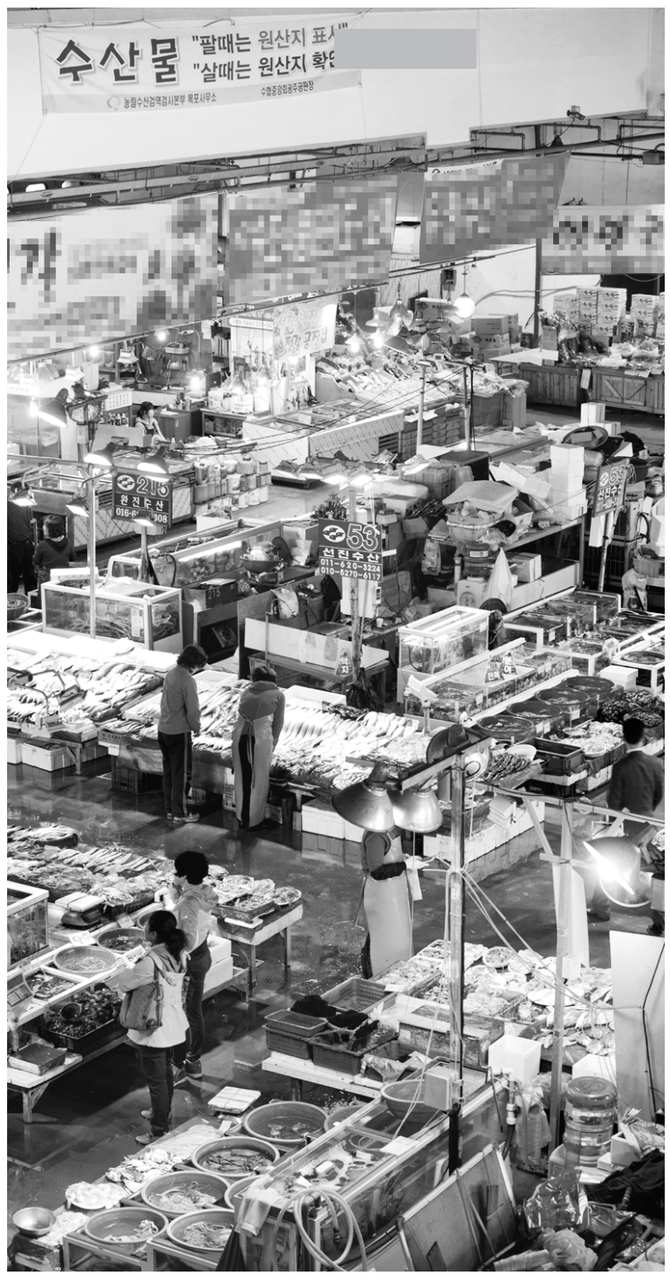
아울러, 일각에서는 중도매인들의 범죄가 알려지면서 매출이 줄자 적발된 곳과 적발되지 않은 중도매인들간 갈등도 점차 표출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검찰에 적발된 중도매인들과 한데 섞이면서 정직하게 영업을 해온 이들마저 ‘도매금’으로 비난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A중도매인은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속여 판 집이 이 집인지 저 집인지 모른다. 소비자들은 이곳에서 판매장을 운영하는 모든 중매인들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줄 안다”며 “일부 중도매인들 때문에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영업정지 또는 영구퇴출과 같은 내부 규정을 만들어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중도매인협회 관계자는 “영구퇴출·자격 박탈 등 내부 규정을 손질해 다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잔품처리장(판매장) 외벽에 ‘수산물 팔 때는 원산지 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일주일새 중고생 3명 자살

안전장치 마련 시급

일주일 사이에 광주지역 중·고교생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여고생 2명 동반자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일어나 사회적·교육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A고 2학년 남학생이 뛰어내려 숨졌다. 이 남학생은 과다수면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에는 B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장애 부모와 조부모를 둔 C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투신 자살했다.

경찰은 이들 3명 모두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 사이의 연관 관계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당혹스럽다”면서 “세 학생 모두 왕따나 교우관계, 학교폭력 등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고생 동반자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자살이 잇따르자, 지역사회와 교육당국은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희곤 광주시의원은 “자살 예방 교육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007년 이후 최근까지 7년동안 청소년 자살이 모두 64명에 달했다.

2007년 11명, 2008년 6명, 2009년 13명, 2010년 5명, 2011년 10명, 2012년 9명, 2013년 7명, 올해도 벌써 3명이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싼 이자 대출” 수억 수수료 폭리

A(50)씨는 최근 ‘최소 1000만~5000만원 대출 가능. 연리 15.5%. 직장인·사업자 우대. 대환·대출 타사 부결자 가능. XX금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연이율 39%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왔던 탓에 낮은 이자로 가능하다는 말에 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했다.

A씨는 2000만원 대출을 요청했고 최모(35)씨 등은 신용등급이 너무 낮다며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고 해 250만원을 입금했다. 다음날 A씨는 두 곳에서 동시에 대출 허가가 나 5000만원이 가능하게 됐는데, 250만원의 추가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2000만원만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미 대출 승인이 나 4000만원을 받지 않으면 아예 취소되며 보증보험료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250만원을 추가로 넣었다. 이후에도 대출금에 대한 사전 예치금 10% 명목으로 500만원.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커미션 명목으로 600만원을 보냈다. 최씨 등은 금융감독위원회 승인 탓에 총 대출 금액이 1억2885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일부 대출 조건이 미흡하니 총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증권료 75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 말을 믿었다. 여기에 대출금 금액이 1억 넘어가는 데 따른 설정비 700만원과 급행 대출금 700만원도 보냈다. A씨가 일주일 동안 보낸 금액만 4350만원에 달한다.

순천경찰은 2일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대출을 문의한 A씨 등 61명에게 수수료 등 명목으로 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은닉재산 확인되면 법과 원칙 따라 철저히 수사”

변찬우 광주지검장 밝혀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2일 광주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변 지검장은 이날 “허 전 회장에 대한 벌금형 집행이 가장 시급한 주요 현안”이라며 “은닉 재산 파악 등 모든 조사를 통해 조속히 벌금형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표명했다.

변 지검장은 또 허 전 회장의 노역형 집행정지와 관련, “애초 반대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형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병우 법원장 사표 수리

대법원이 2일 일당 5억원 짜리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오다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낸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으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파트 관련 보도에 대해 “장 법원장이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은 본인 소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됐음이 소명됐다”며 “아파트 매도 대금도 시세와 차이가 없어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HH건설이 아파트 매도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 “장 법원장이 허씨 판결을 선고한 시점은 2010년 1월로 HH건설이 아파트를 매수한 2007년 10월보다 2~3년 뒤의 일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파출소 도주 절도범 당시 만든 수배전단으로 추가범행 들통

쌍나팔

○…지난해 12월 파출소에서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20대 절도범이 당시 제작된 수배전단 속 사진 때문에 추가 범행이 들통.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6)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3시께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A(여·39)씨의 집에 침입, 컴퓨터를 훔치는 등 두 달간 여섯 차례에 걸쳐 5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함평의 파출소에서 수갑을 풀고 달아난 김씨의 수배전단을 올해 1월 초 우연히 보던 중 아파트 CCTV 속 절도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같은 가방을 메고 있는 점을 포착,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 /박정렬기자 halo@